

판문점선언 이행비용 내년 2986억원 추산

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통일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정한 비용추계서에는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

한 비용으로 29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안 산정했다"면서 "연도별 세부적인 재원소요는 북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간 회담·실무접촉 등을 통해 사업 규모, 사업기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에선 철도·도로 현대화를 완료하는 데만 최소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란도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표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화상 국회의장 주제 정례회 등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대안으로 지도부가 내놓은 지지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놓고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지상욱·이인주 의원은 결의안 채택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바른미래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의안을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의총을 끝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위장전입·과거 판결 문제 제기

법사위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인사청문특위는 11일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어 자격 검증을 실시했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반면,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추천된 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정책질가의 주로 이뤄졌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주요 의혹은 ▲1991년 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1992년 8월 서초구로 이사하면서 마포구 빌라에 주민등록 잔류 ▲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년 11월 마포구 진정으로 위장전입 ▲1995년 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등 8건이나 된다. 또 2001년 12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4억6200만원에 사들였지만, 실제 거래가격보다 2억8100만원 낮은 1억8100만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

자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영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 부분이 없었던 만큼 사형제와 동성애, 동성혼 등에 관해 묻거나, 다른 재판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점에 대한 견해 등 정책적 질의가 주로 이뤄졌다. 다만, 이 후보자가 판사로서 내린 판결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15년 후보자가 판결한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 "판결문을 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의도까지 읽을 정도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 상식을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이 후보



靑 정무수석 與 방문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지도부 '부동산 해법 찾기'

경기도청서 예산정책협의회...이재명 지사와 정책 논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1일 경기도지역을 찾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 지역 사회·경제 현안은 물론 경기도 예산과 관련한 당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심은 단연 부동산 문제였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을 칠 적에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

부가 모색 중"이라면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이 개념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 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TK 찾은 한국당, 경제정책 비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1일 경북 구미와 대구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김 위원장 등은 이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사무소에 이어 대구 서문시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경주 한 국수력원자력 노조의 대화 등을 위해 몇 차례 대구·경북(TK)을 방문했지만, 한국당 텃밭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대구 서문시장을 찾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의 생가에서 '새로운 성장 발판'의 각오를 다지고 대구 밀바닥 민심을 청취함으로써 여야 간 격한 공방이 펼쳐질 정기국회에서의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한국당 지도부는 구미·대구 방문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구미산단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 "갑갑한 공장의 생산시설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 현 정부가 앞으로도 어려움을 덮을만한 산업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 같다"며 "청와대·정부를 둘러싼 이념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은 젓혀두고 성장이란 이름을 붙여 분배 위주의 정책을 내놓고 고집한다"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딱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근로시간 연장은 사용자와 근로자, 노조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법·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민주 법사위원, 양승태 사법농단 국조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민주당 송기헌 간사를 비롯해 이춘석·김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조승천·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1일 오전 제2차 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뜻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어 이들 법사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접하고 더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

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과 만나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민주평화연구원장에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은 11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연구원 신임 원장에 6선의 천정배(사진)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신임 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천 의원은 "선명한 개혁정당, 유능한 민생정당, 상생과 평등의 시대를 열 수 권 대안정당으로 당을 발전시키도록 힘

껏 노력하겠다"며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기 위해 여려 정당, 시민사회와 널리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성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일반대학원	박사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 ~ 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